

심사대상 : 작업장

2020년도 안전관리등급제 심사결과보고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본 심사의 주된사항은 개별 소관법령에 따라 실시한 기존 안전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개선할 점을 제시하고 각 기관에서 제출한 안전경영책임보고서를 근거로 진행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I 심사 등급 : 종합 5등급

1. 등급 요약

구분	등급
종합등급 [①+②+③]	5
① 안전역량	5
② 안전수준	5
③ 안전성과 및 가치	4

2. 세부 등급

범 주	심사 분야	심 사 항 목	배점	등급
안전역량 [300점]	① 안전역량 등급		300	5
	1. 체계 역량	소 계	170	E
		① 안전보건경영 리더십	40	C
		② 안전보건경영체제 구축 및 역량	40	E
		③ 안전보건경영 투자	30	D
		④ 안전관리규정 및 절차·지침	30	E
		⑤ 안전관리 목표 및 안전기본계획 수립	30	D
	2. 관리 역량	소 계	130	E
		① 위험성평가 실시 체계	30	E
		② 근로자 건강 유지·증진 활동 체계	30	E
		③ 안전보건교육·안전인식·활동참여	40	E
		④ 재해조사 및 비상상황 대비·대응 능력	30	E
안전수준 [450점]	② 안전수준 등급		450	5
	1. 작업장	① 작업장 기본 안전보건관리 수준	50	D
		② 기계·전기 설비 위험방지 및 추락예방 조치	150	D
		③ 화재 및 화학물질사고 예방활동 수준	90	E
		④ 위험 작업 및 상황 안전관리	60	E
		⑤ 수급업체 안전보건 관리	100	E
안전성과 및 가치 [250점]	③ 안전성과 및 가치 등급		250	4
	공통	① 안전보건경영 성과측정	30	E
		② 안전경영책임 활동 및 성과(안전경영책임보고서)	100	D
		③ 안전문화 확산	20	E
		④ 사망사고 발생 및 감소 성과	100	A

※등급 구분표(100점 기준 환산점수 적용)

심사항목별 등급	90점대		80점대		70점대		60점대		60점 미만	
	A		B		C		D		E	
안전경영책임보고서 등급	100점 A+	90점 A	80점 B+	70점 B	60점 C	50점 D+	40점 D	30점 E+	20점 E	

Ⅱ 심사 의견

○ 심사범주별 요약

범주	심사 총평
안전역량	<p>기관은 ‘안전과 환경친화적 경영에 앞장서고, 행복과 성장이 조화로운 직장을 만들어 가자’라는 자세로 경영하고 있으며, ‘안전보건 경영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라고 자세로 접근하고 있다. 또한,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한 전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 조성’에 노력해야 한다.’라고 기관의 특성을 함께 공유하고 있다.</p> <p>다만, 안전보건은 인간의 생명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전 직원과 협력업체 및 이해관계자가 동참하여 시행하도록 안전보건경영방침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이 되며 자율안전관리 제도인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전 직원이 실행하는 방향으로 노력할 여지가 있다.</p>
안전수준 [작업장 안전관리]	<p>안전수준 범주 분야는 기관이 보유한 건물, 시설 및 설비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법정요구 사항대비 어느 정도로 유해·위험 관리를 하느냐를 평가하는 분야로 전반적으로 안전관리가 소홀함을 보이고 있어서 분야별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전 안전점검, 안전진단 등을 통하여 법 위반 또는 안전조치 대상 중 미비사항에 대한 집중관리와 개선조치가 종합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된다.</p>
안전성과 및 가치	<p>기관은 안전관리 목표 달성 및 안전경영책임 이행을 위하여 안전보건활동에 대한 성과측정 계획을 수립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성과 측정 결과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원인파악, 개선대책 수립 및 환류 활동 등을 통해 개선하여야 하며, 안전경영책임계획 이행 상황에 대한 점검내용 및 다음 연도 주요 계획 등을 안전경영책임보고서로 작성하여 관리함으로써 주요 안전 활동의 지속적인 이행과 발전을 통해 안전보건 수준을 향상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된다.</p> <p>또한 자체적으로 위험성 평가를 위한 안전관리지침을 제정하고 담당자 위험성 평가 교육을 이수 하였지만 현장에 능통한 현장 근로자와 외부 전문가의 지원을 통한 작업장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 유해·위험요인을 제거 또는 감소함으로써 산업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사고 Zero 사업장이 되도록 재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된다.</p>

1 「안전역량」 범주 심사

- 1. 체계역량**
- 2. 관리역량**

1. 체계역량

【1】 안전보건경영 리더십

핵심가치

최고경영자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두어야 하며, 안전보건경영방침을 전 임직원이 인지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실천하여야 한다. 아울러, 안전보건경영방침은 기관의 사업특성과 제반 안전보건 여건을 반영하여야 하며, 전 임직원이 공유하여야 한다.

심사의견

○ 기관의 최고경영자 면담 결과, '안전과 환경친화적 경영에 앞장서고, 청렴한 조직문화와 윤리경영을 통해 행복과 성장이 조화로운 직장을 만들어 가자'라는 자세로 경영하고 있으며, '안전보건경영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라는 자세로 접근하고 있다. 또한,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한 전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 조성에 노력해야 한다.'라고 기관의 특성을 함께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 기관은 출장업무 수행 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노후화된 차량을 교체하고, 극한 장소 근로자 보호를 위한 ICT 기술 적용을 검토하는 등 근로자 보호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우선으로 고려하고 외부 작업자의 안전에 만전을 기할 것을 강조하며 이러한 환경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 안전전문 인력 보강, 노사화합을 안전경영에 반영한 것이 확인되었다. 다만, KCA ECO 2030 환경경영 전략에서 안전을 극히 일부만 다루었으며, 안전보건활동 강화를 위한 노력이 `20년 하반기에 집중된 점은 다소 아쉬운 부분이다.

○ 기관은 산재예방·시설안전 기본방향을 인트라넷 및 재난안전 게시판을 통해 구성원들과 공유하고, 책임자·안전담당자·현장 근로자의 안전 인식 및 문화를 확산 노력에 반해 안전보건경영 방침 및 공유 적정성에 관하여, 기관은 '안전이 상시 내재화되는 안전경영 체계 수립·이행 및 참여와 소통의 자율 안전문화 확산을 통한 안전사고 'Zero' 추진'이라는 산재예방·시설안전의 기본방향 내용에 있어 구체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 최고경영자는 현장의 안전점검, 위험성평가 등 안전보건활동에 정기적으로 참여하거나 주관하고 있으며, 특히 지하철 무선국에 대한 야간검사 현장을 방문하여 관계 근로자를 격려하는 등 현장 안전보건을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영자 안전보건활동 직접 참여 여부에 관하여, 최고경영자의 정부 주재 회의에 참석한 실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개선할 점 요약】

1. 안전경영 체계 수립·이행 및 참여와 소통의 자율 안전문화 확산을 통한 ‘안전사고 Zero’추진 내용에 있어 구체화 필요

【2】 안전보건경영체제 구축 및 역량

핵심가치

공공기관은 기관 규모와 사업의 종류에 적합한 안전관리체제를(안전관리조직 구성, 안전관리 업무 총괄 권한 부여 등) 구축하고, 안전관리조직 구성원의 전문성 향상, 동기부여 등 안전관리조직 운영 내실화에 힘써야 한다. 또한, 안전근로협의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등을 법정 기준 이상으로 운영하여야 하고, 안전보건경영 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심사의견

○ 기관의 안전관리조직은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와 관련 자격을 소지한 안전관리자(센터장), 보건관리자(간호사)로 구성하여 체계적인 운영을 위한 전담조직을 설치하였음에도 시설관리·경비·청소(미화) 인력을 안전조치 인력으로 포함하여 업무분장을 한 점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

○ 기관은 공공기관 안전담당자 실무교육, 재난대응 교육과정 이수 등 일부 안전보건관련 교육을 통한 전문성 향상 활동을 추진 중이나, 안전보건 관련 자격취득 및 외부 전문교육 등의 체계적인 이행 및 관리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안전전문성 향상을 위해 팀장급의 전문인력을 보강한 점은 인정되나, 전문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인사우대를 위한 인사규정 시행규칙이 마련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노력이 요구된다.

○ 기관은 안전관리 중점기관으로 부원장인 기획실장 직속인 안전전담조직은 안전기본계획의 수립, 안전보건교육관리, 안전점검 및 제언 제도운영 등 기관의 안전보건활동 전반에 대해 업무분장을 하고 있으나, 최근에 편제를 완성하여 실행력의 확보 및 제고를 담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이를 실행하기 위한 구성원의 관심과 체계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 실제 실행조직(지사 등)에 총괄 안전보건 조직과 업무를 연계하는 등 담당자 지정 여부에 대해서는, 기관 본사, 지방본부, 빛마루센터 등에 안전담당자를 두고 있으나 안전기본계획 이행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구체적으로 부여하고 그 내용을 명시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안전근로협의체 회의를 부기관장인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주관으로 연 4회 개최하였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라 최고경영자 주관 하에 연 4회 개최한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안전경영위원회, 안전근로협의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의 적정성에 대해서 기관은 안전경영위원회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최고경영자가 주관하여 외부전문가의 다양한 자문을 듣는 등 연 3회에 운영하였다.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에 관해서, 기관은 KOSHA-MS 인증을 도입하려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준비 회의를 하였으나 안전관리계획의 이행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개선할 점 요약】

1. 개편된 조직의 실행력 확보 및 제고를 담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 노력
2. 안전보건 관련 자격취득 및 외부 전문교육 등의 체계적인 이행 및 관리

【3】 안전보건경영 투자

핵심가치

공공기관은 안전 관리 및 예방 관련 사업을 실행하기 위하여 충분한 안전보건 예산을 지원하여야 하고, 기관의 안전보건 관련 현황 조사 및 분석을 통해 예산을 합리적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또한, 안전예산을 적기에 집행하여 산업재해 예방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심사의견

○ 기관은 위험시설에 대한 정비 및 개·보수, 안전 R&D 예산, 인명안전 무선국 관리와 전자파 안전관리 항목에 상대적으로 많은 예산을 책정하고 있으며 안전보건관리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험시설에 대한 정비 및 개·보수, 안전 R&D 예산, 인명안전 무선국 관리와 전자파 안전관리 강화 등의 사업 확대를 위한 예산을 확대하여 조성하였다. 또한, 전파·방송 등 기관의 주요사업과 연계한 국민생활속 안전관리 강화 및 5G·IoT 등 ICT 기반의 국민안전 서비스 지속 발굴·추진에 우선순위를 고려한 점이 확인된다. 하지만, 안전보건 관련 교육·훈련비용, 안전관련 물품 및 장비 구입비 등을 보완 반영하여 작업장 안전확보 취지에 부합하는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예산 편성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 기관의 집행 내역은 안전 R&D가 전체 집행의 7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20년 안전기본계획에 근거한 안전보건관리 예산은 총 3백만 원으로 이 중 집행률은 97%로 나타난 반면, 작업장 안전 관련 교육·훈련 및 홍보 등과 같은 실질적인 근로자 안전보건 역량강화, 건강증진활동 비용 등을 예산집행지침·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등에 충분히 반영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개선할 점 요약】

1. 안전보건 관련 예산은 안전확보 취지에 부합하도록 집행계획 수립
2. 근로자 안전보건 역량강화 및 건강증진활동 비용 등 실효성 높은 예산 반영

【4】 안전관리규정 및 절차·지침

핵심가치

기관은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기 위한 제반 사항을 규정한 안전관리규정과 항목별 하위 절차서 등을 「산업안전보건법」,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등 안전관련 법의 요구사항과 기관의 위험요인 및 작업 특성을 반영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또한, 규정 및 지침 등의 관리를 위한 제·개정 절차 등을 수립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심사의견

○ 기관은 안전관리지침을 제정(`19.11월)하고 사고발생 문책 등의 조항을 추가하여 안전관리규정(`20.12월)을 개정하였고, 안전관리책임자(부원장), 안전관리자(센터장), 관리감독자(각 부서장) 및 안전담당관(각 팀장)을 지정하였다. 또한, 규정 내에 안전경영위원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안전근로협의체 설치·구성, 작업중지 요청제, 작업허가서 발급·이행 및 사고 발생 시 문책 등을 반영하고 있다.

○ 다만, 기관은 지침 내용에 본사, 지방본부 및 사업소의 특성을 고려한 안전조직 체계 정비, 근로자의 안전수칙 준수, 안전보건표지 및 수칙 등의 내용과 근로자 대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도록 하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안전근로협의체를 구성하여 심의·의결과정을 거치는 등 제·개정 절차에 대한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20.1월),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기획재정부, `20.6월) 등 관련 법령을 개정 시점에 맞추어 반기 1회 등 주기적으로 안전보건관리지침을 개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아울러, 산업안전보건법 외 당 기관에 적용되는 안전 관련 타 법령의 요구사항이 지침에 반영되지 않은 부분은 개선의 노력이 필요하고, 또한 수립된 지침 등이 원·하청 근로자들이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내부전산망, 게시판 및 교육 등을 활용하는 노력이 이행되어야 한다.

○ 일반작업안전 절차서 및 지침에 대해서 건축조경업무, 전기업무, 기계업무, 통신업무, 미화업무 및 공통업무 등 21개 작업이 포함된 KCA 안전작업 매뉴얼을 제정하여(`20.12월)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을 확대하고 있다. 다만, 기관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휴일 및 야간 등 취약시간대 작업 기준, 사무실, 통로 등의 작업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그 작업에 따른 기관 특성을 반영한 안전지침이 지속적으로 제·개정되어야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관련 지침서 제·개정 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안전근로협의체 등을 통해 의견을 수립하는 과정과 원·하청 근로자가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내부전산망, 게시판 및 교육 등의 노력이 필요하고 아울러 지침서 등이 연말에 제정된 사유로 이행 여부는 확인할 수 없었다.

【개선할 점 요약】

1. 안전관리지침에 기관특성을 고려한 내용과 근로자 대표의 요구사항 반영
2. 안전관련 근로자 의견 수립 절차와 결과를 공유할 수 있는 체제 마련

【5】 안전관리 목표 및 안전기본계획 수립

핵심가치

공공기관은 기관의 업무특성을 반영하여 안전관리 대상 사업·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목표를 구체적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또한, 안전기본계획(안전경영책임계획)을 안전관리 대상 사업 및 시설별로 실효성과 내실성 있게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이행함으로써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심사의견

○ `20년 안전기본계획 수립 시 산업안전, 시설안전, 재난안전 분야의 안전사고 ‘Zero’목표를 설정하고, 내부환경과 외부환경 분석을 통해 ‘안전중심경영으로 국민과 근로자의 생명·안전보호’를 비전으로 정하여 추진하였다. 그리고 안전기본계획 전년도(`19년) 평가에서 안전중심의 중장기 경영전략체계 개편 및 안전전담조직을 신설하였으며, 산재예방시설 안전관리강화 및 전파기반의 국민안전 서비스 제공 등의 노력으로 기관 설립 이후 30년간 안전사고 사망자 ‘Zero’를 달성하였다. 또한, 기관 특성에 맞는 정책역량과 인프라를 바탕으로 4대 추진방향(산업재해 사망자 Zero, 시설안전 사고 사망자 Zero, 국민안전 무선선국검사 16,500국 및 사회취약계층 전자파 관리 650)을 설정하고 안전경영, 안전인식 전환, 시설안전, 안전문화, 수급업체 및 대국민 안전 등 12가지 추진과제를 수행한 내용이 확인된다.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안전근로협의체 등을 통해 점검하여 환류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시한 기록이 없고, 실행과제별 계획 대비 실적을 파악하여 결과를 관리하고 추진부서 및 담당자 지정 및 이행점검 결과 추진실적이 미흡한 사항에 대해 개선대책을 수립·이행하는 등 자체 모니터링 활동을 통하여 안전기본계획의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 또한, `19년 8월 직제규정을 개정하여 ‘안전센터’를 신설하고 안전전담조직을 구성한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안전센터 직원이 센터장 포함 4명으로 기획 2명, 자격자 2명 인력을 갖추고 있으나, 안전과 관련된 교육훈련을 교육훈련계획에 포함하여 인사노무팀에서 수행하고 있고, 센터장이 겸직(`20.12월까지)을 수행하는 등 전담조직의 활동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직 차원의 협조가 필요한 것으로 평가된다.

【개선할 점 요약】

1. 전담조직의 활동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직 차원의 협조
2. 안전경영책임계획(구 안전기본계획) 실행과제 이행여부 모니터링 절차 마련

2. 관리역량

【1】 위험성평가 실시 체계

핵심가치

공공기관은 직영·도급·발주공사의 현장에 대해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위험요인을 발굴하여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는 절차를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위험성평가 실시 규정은 평가 주체, 평가팀 자격 및 구성, 평가기법, 평가 절차, 관련자 교육, 위험성 감소대책 이행, 평가 결과 활용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심사의견

○ 기관은 안전보건관리규정 하위로 위험성평가 절차서(`19년 수립)를 두었으며, 조직 및 업무분장은 기관의 상황과 특성에 맞게 작성하였고, 안전보건공단이 제공한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을 참고하여 위험성평가에서 필요한 요소(목적, 조직, 방법, 절차, 위험성 추정·결정, 유의사항 등)를 갖추고 있다. 또한, 안전보건관리규정에 위험성평가 조항을 포함하여 목적과 역할, 방법 등 개괄적인 내용과 시행 근거를 마련하였다.

○ 다만, 수급업체 위험성평가 이행 근거 마련을 위해 ‘도급 및 발주 작업장 위험성평가 점검 계약조건 지침(`19년.12월)’을 수립하겠다고 계획안에는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문서 및 지침은 작성되지 않았고, 위험성평가 절차서의 대다수의 내용은 안전보건공단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예시의 내용을 사용하였으므로 기관의 상황과 작업에 맞게 보완할 필요가 있으며 `20년 위험성평가 계획은 수립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 위험성평가 추진활동에 대해서, 위험성평가 절차서에 따라 본사 위험성평가를 수행하였다. 다만, 위험성평가 담당 및 관련자(근로자 포함)들과 위험성평가 사전 회의 실시 실적과 안전보건자료(위험작업 등)를 사전 준비단계에서 활용한 내용을

확인하지 못하였으므로 위험성평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사전준비와 교육을 철저히 이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위험성평가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한 위험성평가 담당자 내부 교육을 실시한 내용을 확인하지 못하였고, 외부 교육의 경우 안전전담 부서 인원 소수만 이수하여 위험성평가 수행에 대한 전문성 확보가 시급하다.

○ 기관은 위험성평가 절차서에 따라 위험성이 4 이상으로 추정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해서 대책을 수립하고 개선활동을 수행하여야 하나, 이에 대한 실적은 확인되지 않아 위험성 추정에 따른 개선활동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사의 위험성평가 결과만 확인되었고, 그 외 지사에 대한 위험성평가 결과를 확인할 수 없었다. 본사 위험성평가 확인결과, 사무업무(행정사무업무) 위주로 평가하였으므로, 건물관리와 보안 등 주요업무에 대해 보완하여 평가할 필요가 있다.

【개선할 점 요약】

1. 위험성평가 계획 및 도급 및 발주 작업장 위험성평가 점검 계약조건 지침 마련
2. 위험성평가 시 건물관리와 보안 등 주요업무에 대해 보완 필요

【2】 근로자 건강 유지·증진 활동 체계

핵심가치

기관은 근로자의 건강 유지·증진과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명시된 건강진단, 작업환경측정과 더불어 자율적인 건강증진 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COVID-19를 포함한 감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한 인프라 및 예방 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사회적 약자(고객응대 근로자)에 대한 보호에 힘써야 한다.

심사의견

○ 기관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안전관리규정 제3절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따라 건강진단 종류별 실시 시기 및 결과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20년도 제1차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의결사항으로 직원 건강검진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등 노사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지만, 건강진단실시에 따른 건강 이상 소견자를 파악하고 사내 프로그램 등을 구

축하여 자료를 관리하고, 건강 이상 소견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해 담당자를 지정하여 관리하는 등 근로자 건강유지에 대한 기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 건강증진활동과 관련하여, '20년 기관 안전기본계획에 예산 및 인력을 반영하여 임직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힐링 프로그램 및 캠프를 실시하고 있으며, 안전관리규정 제56조(직원건강유지 및 증진)에 장시간근로, 차량 운전 작업 등 신체적 피로와 감정노동에 따른 정신적 스트레스 등에 대한 건강장애 예방을 위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다만 건강증진계획 목표 설정, 추진사항에 대한 평가 및 계획의 재검토, 추진담당자를 지정하는 등 구체적인 계획수립을 통해 실행력을 제고 할 필요가 있다.

○ 코로나-19 등의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조치와 관련해서는 감염병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및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에 감염병 위기경보별 조치사항에 따라 부서별 업무를 지정하고, 청사 출입 전 발열 및 호흡기 증상 등 이상증상자 감시, 마스크·소독제 등 방역물품을 지급하는 등 예방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개선할 점 요약】

1. 건강진단 사후관리 담당자를 지정하는 등 근로자 건강유지 노력
2. 근로자 건강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수립을 통해 실행력 제고

【3】 안전보건교육·안전인식·활동참여

핵심가치

공공기관은 안전관리 대상 사업·시설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안전 지식 습득 및 실천을 통한 안전보건 인식수준 향상을 위하여 안전보건교육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또한, 소속 직원 및 작업장 근로자가 안전을 위한 개선과제를 제시할 수 있도록 신고·제안·포상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심사의견

<안전보건교육>

○ 기관은 수립된 교육계획에 따라 외부 전문 교육기관을 통하여 법정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교육실시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주기적으로 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미수검자에 대하여 인사 평가 시 불이익 조치를 하는 등 안전보

건교육을 근로자가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더불어, 인터넷 교육을 통하여 비대면 교육을 실시하고, 공무원들은 대면 교육을 실시하는 등 적절한 방법 등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근로자가 교육을 수료할 수 있도록 메일, SMS,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하여 교육을 독려하고 있다. 다만, 교육계획에 대한 내용 및 시기가 구체적으로 수립되지 않아 미비한 사항이 있고, 특별안전보건교육은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도록 안전관리규정에 명시되어 있으나, 수립하지 않은 사항이 확인된 점은 보완이 필요하다.

<관리자 및 근로자 등의 안전보건활동 참여>

○ 관리자 및 근로자와 면담결과, 업무수행 시 필요한 보호구, 화재 등의 비상사태 발생 시 조치사항 및 심정지 등의 질환으로 갑작스럽게 쓰러진 경우에 긴급하게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이 마련되어 있고, 담당업무(무선국검사 등)에 대한 위험성 평가 상의 주요 유해위험요인과 개선대책 및 안전보건수칙을 숙지하는 점이 확인됐다. 다만, 기관은 안전경영방침과 목표를 인트라넷 및 재난안전 게시판을 통해 일부 근로자와 공유하고 있는 점과 사무직 종사 근로자에 대한 직무 스트레스 파악과 괴롭힘 등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 마련 등은 개선의 여지가 있다.

○ 제안제도에 관해서 안전관리규정 제67조(포상) 근거로 운영되는 KCA 혁신방과 특특신문고에 안전보건과 관련된 제안이 `20년 2건이 접수되었으나, 2건의 제안 중 심사를 통과하여 채택된 제안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안전보건 신고와 관련된 제도를 실행하기 위한 계획이 없어 제안제도가 안전보건수준을 향상시키는 제도로 활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제안제도 참여, 공유 대상이 내부직원으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수급업체 근로자의 참여를 유도하고 직원들의 실질적인 참여를 활성화하는 제도(예: 내부평가 지표 포함)로 기획 및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 현장작동성 평가에서 관리자 및 근로자에 대한 면담결과, 전기설비 설치, 집수정 펌프 교체 및 스튜디오 설치·해체 등과 관련하여 작업절차, 위험요인과 개선방법, 착용해야 할 보호구 등에 대해 인지를 하고 있으며, 분기별 자체 소방훈련과 연 1회 유관기관 합동 소방훈련 실시로 비상사태 발생 시 개인별 임무와 대피 경로 등에 대한 숙지하고 있는 점도 확인된다. 다만, 안전보건 경영방침과 목표 등에 대한 인지 수준이 낮은 점, 안전보건 관련 신고 및 제안 절차 등도 체계적으로 작동되지 않는 점, 위험성평가에 대한 내용, 절차 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점은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개선할 점 요약】

1. 교육계획에 대한 내용 및 시기의 구체적 수립
2. 직원들의 안전보건 관련 방침과 제도에 대한 인지수준 향상 개선 필요

【4】 재해조사 및 비상상황 대비·대응 능력**핵심가치**

공공기관은 재해 원인조사 및 아차사고 발굴을 위한 매뉴얼·절차서 등 지침 운영을 통해 산업재해 및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기관의 안전관리 대상 사업·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비상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사고시나리오를 기본으로 한 비상조치계획 수립, 소속 직원 교육 및 훈련, 대응을 위한 시설·장비 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심사의견**<비상 시 대비 및 대응>**

○ 기관은 비상시 대비·대응지침 및 비상 시나리오 선정·교육·훈련, 관련 시설 장비관리와 관련하여, 안전관리규정 및 `20년 안전기본계획, 소방계획에 따라 비상시 대비·대응 계획을 수립하였다. 다만, 대국민 이용시설 안전관리 체계를 위하여 기관은 대국민 이용시설인 빗마루 공연시설에 대하여 시설의 특성에 맞는 비상시 대비·대응 지침을 마련하여 비상조치 단계별 대응체계, 비상대책 위원회의 조직 및 구성, 업무분장, 비상시 보고체계, 비상대피로 및 대피장소 관리 계획 등을 계획하고 훈련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시설물 및 화학물질 저장 탱크 화재폭발위험 등을 고려한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비상상황에 따른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인 구조, 응급조치 절차, 비상시 보호구 착용지침 등 기관의 특성에 맞게 실행 가능한 구체적인 비상시 대비 및 대응 지침을 수립하고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 한편, `20년 소방계획, 종합운영 유지관리계획 제5장(방재통신설비 유지보수)에 비상발전기, 소방시설, 방송 및 통신시설에 대한 점검항목을 추가적으로 보완하여 정기점검 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재해조사 및 재발방지>

○ 재해 사례를 지방본부별로 안내하고 있어 산업재해 및 안전사고 등에 대응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또한, 안전보건관리규정에 재해 처리절차, 재해발생 현황분석, 대책수립 항목 등이 작성되어 있고, 사고발생 보고서와 조사보고서 서식이 별지 서식으로 명시되어 있다. 다만, 재해발생 시 조사 시기 및 방법, 조사팀 구성 등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고, 발생한 재해에 대한 사고조사보고서 등 자료를 확인할 수 없어 재해 기록·유지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아차사고 발굴 및 개선 노력에 대하여는 발굴 지침 및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 아차사고에 대한 계획 수립이 먼저 이루어져야 하고, 아차사고 발굴을 통한 위험요소 개선활동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판단되었다.

【개선할 점 요약】

1. 시설물 및 화학물질 저장탱크 화재폭발위험 등을 고려한 시나리오 작성
2. 기관 특성에 맞는 비상상황 대비 및 대응 지침을 수립하고 교육
3. 재해발생 시 조사 시기 및 방법, 조사팀 구성 등의 내용 구체적 명시

2 「안전수준」 범주 심사

1. 작업장 안전관리 [산업안전보건법,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1. 작업장 안전관리

【1】 작업장 기본 안전보건관리 수준

핵심가치

공공기관은 근로자 및 이용국민이 작업장·건축물·구조물 등을 안전하게 이용하거나 작업할 수 있도록 통로 확보 및 정리정돈, 출입문 및 비상구 유지·관리, 위험요소에 대한 경고, 필요한 보호구 지급 및 착용안내 등 기본적인 안전관리 활동을 실행하고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심사의견

○ 기본안전보건관리 수준 평가를 위해 일부 시설(현장작동성평가 포함)을 확인한 결과, 대부분 경고표지가 있어야 할 해당 장소에 부착하거나 MSDS가 있어야 할 곳에 비치할 하였고, 안전보건표지 부착 및 화학물질 경고표지에 대해서 기관은 안전관리규정 조항에 포함하여 시행근거를 마련하는 등이 확인되었다. 다만, 안전관리규정 이하 세부지침 등이 없어 사용자(근로자 등)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부착하여야 하는지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된다.

○ 또한, 기계실·전기실 내 바닥 여러 곳에 건축자재나 시멘트, 화학물질, 용기 등이 방치되거나 일부 기계·기구설비를 지지하는 구조물 틈으로 각종 부품이나 자재가 보관되어 있고, 높이 2m 이내의 냉·난방밸브 개폐용 체인 등이 있으므로 작업장소 정리정돈 및 장애물을 정리하여 안전한 통로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조도확보와 관련해서는 본사 동 기계실 내에 있는 물탱크실 조도가 기준 이하(약10lux)이므로 추가조명이 필요하다.

○ 추락의 방지를 위해 안전난간 등은 설치하였으며, 출입구나 비상구 등에는 출입을 방해하는 물품 등을 적재하지 않고 통로를 확보하였다. 다만, 기계실 바닥에는 배관(파이프라인) 등 기계설비가 설치되어 있어, 안전한 통로를 확보하기 위해 덮개나 건널다리(발판 폭 40cm이상)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 소화가스에 경고표지를 미부착하고 기계실 내 일부 화학물질 용기에는 경고표시가 부착되지 않아 어떤 화학물질인지 알 수가 없으므로 전반적으로 화학물질을 파악하여 MSDS 조치상태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전반적으로 중량물

경고표지(5kg 이상)가 부착되어 있지 않아 근골격계질환에 대한 경각심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며, 안전보호구(안전화, 안전모, 안전장갑, 귀마개 등)착용에 대한 지시표지를 확인하기가 다소 어렵고, 특히, 현장작동성 평가 중 스튜디오 내 매달린 물체 경고표시 등이 확인되지 않은 점은 안전의식 제고를 위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다.

○ 현장작동성 평가에서 기계실, 전기실 및 통로 등의 조도 상태는 적정하며, 출입구 및 비상구 등도 양호하게 유지·관리하고 있다. 비상발전기와 소화가스실에서 보유하고 있는 화학물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는 양호하게 게시되어 있고, 비상대피 안내도는 건물 각 층 승강기 및 화장실 입구 주변에 부착되어 있다. 다만, 기계실·전기실 내 통로표시가 없고, 옥상 및 비상발전기실 내에 설치된 파이프라인으로 인해 걸려 넘어질 우려가 있는 등 안전한 통로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 개인보호구는 안전인증 등을 받은 제품을 개인별로 지급하고 있으며 안전모 등 일부 보호구에 한해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보호구의 관리 상태는 방재실 및 전기실에 비치된 보호구함에 보관하는 등 양호하게 관리되고 있다. 다만, 보호구 지급대장이 작성되지 않는 등 보호구 관리가 미흡한 점은 보호구 관리 매뉴얼 제정을 통해 관리기준을 마련하여 이행할 필요가 있다.

○ 개인보호구 지급 및 대장관리에 대해서는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보호구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그 시행근거를 확보하였고, 방재실 등 기타 보호구가 필요한 곳에는 해당 보호구를 비치하였으며, 보호구에 대한 각 지사별 수요조사를 통해 이를 지급하는 등 보호구를 지급·착용하고 있는 것이 확인된다.

○ 다만, 안전보건관리규정 이하 세부지침이 없어 사용자가 이를 준수하기가 다소 어려우며, 방재실은 대다수 방독면이 내부에 비치되어있어 피난 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또한, 방재실과 기타 기계실, 전기실 등 소화시설이 가스로서 질식의 위험이 있으므로 질식 재해자를 구출할 수 있는 공기호흡기를 비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전반적으로 근로자별 개인보호구함이 없고 보호구 등이 일부 자재나 도구들과 같이 보관되어 있으므로 위생적인 관리를 위해 전용보호구 함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

【개선할 점 요약】

1. MSDS 관련하여 세부지침 제정 및 근로자 공유
2. 보호구 관리 기준 마련

[2] 기계·전기 설비 위험방지 및 추락예방 조치

핵심가치

공공기관은 (전기)기계·기구·설비 및 구조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법정 위험방지조치, 추락·낙하·붕괴 예방조치를 실시하고 항상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심사의견

○ 각 기계·기구 목록상 해당 법령에 따른 검사대상 여부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각 담당자들의 경험과 지식으로 안전검사 여부를 확인하고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로 인해 구체적으로 법정검사를 수행하고 있는지 확인이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안전보건관리규정 상 안전인증 제품의 선정 및 사용에 관한 내용이 없으며 이에 대한 지침도 없으므로 기관은 주요 기계·기구 및 설비에 대한 법정검사 여부와 주기, 검사업체 등을 파악하여 이를 목록화하고 관련 부서에서 체계적으로 검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다.

○ 정비·점검·청소 중 불시기동에 의한 재해예방에 대해서는 안전보건관리규정에 의거하여 실제 현장의 일부 작업(전기, 고소작업 등)에 시행하고 있었으며, 현장 근로자 인터뷰 결과, 안전한 작업절차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었다. 다만, 포괄적인 내용의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세부지침 및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상세 지침 및 계획을 수립하여 현장 근로자에게 준수하도록 공유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관에서 정하는 위험작업을 확대하여 상세 분류하고, 수급업체에도 적용토록 하여 작업허가절차를 전반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다.

○ 다만, 목록에 기계와 설비의 위치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배치도가 없으며, 각 장비별 관련 법에 따른 검사대상 확인이 없어, 관리의 효율을 위해 이를 추가하여 보완할 필요가 있으며, 안전보건관리규정과 KCA안전작업 매뉴얼, 종합안전유지관리계획서의 연관 관계가 다소 부족하며, 장비별 관리책임자와 점검자가 있으나 이에 대한 자격요건이나 점검 조직이 없어 체계는 다소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추가적으로 이러한 계획과 관리를 각 지사별로 수행하고, 그 결과를 본사에 보고 및 취합하고 있지 않아 전사적 차원의 관리가 필요하다.

○ 안전보건관리규정에서는 세부적으로 KCA안전작업 매뉴얼(작업안전수칙)과 종합안전유지관리 계획서를 수립하여 건축, 조경, 기계, 전기, 통신 등 안전점검에 대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또한, 종합안전유지관리 계획서상에 장비 목록을 보유하고, 각 시설 및 장비별로 관리책임자와 점검자가 정해져 있다.

○ 작업장소 및 통로 등의 추락 방지조치에 대해서 현장 근로자 안전근무 매뉴얼을 통해 현장출동(전파시설 검사 등)시 안전한 작업방법에 대한 사항을 근로자에게 주지하도록하고 있다. 다만, 이는 현장 출동 근로자가 지켜야 하는 수칙 위주로 추락을 예방하고 발생 시 조치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구체적인 조치(개인당 안전보호구 지급물품 및 설비, 이동식 사다리 사용시 2인 1조 및 안전모 착용, 작업계획서 작성 및 작업 지휘자 배치, 현장 출동팀의 안전관리 및 비상조치 조직 구성 등)는 확인하기 어려웠다. 또한, 본사동의 기계실의 물탱크 상부에 올라가는 사다리에 대하여 관계자의 출입금지 조치가 일부 없었으며, 특히 고소작업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상 조치(작업계획서, 작업지휘자 배치 등)를 시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반드시 주지시키고 작업마다 준수토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 건축물 또는 시설물 안전조치에 대해서는 안전보건관리규정 중 기계기구 및 설비의 방호조치 조항에 기계기구 설비 및 건축물에 대한 사항을 내용에 포함하여 실행근거를 확보하였다. 또한, ‘종합안전유지관리계획서’를 통하여 건축물,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사항을 구체화하여 이를 준수하고 있다. 다만, 각 점검을 수행하는데 있어 필요한 점검 양식은 없었으며, 특히, 기계실 내에 기계·기구 설비를 지지하는 구조물과 건축물에 대하여 자체점검을 수행하지 않아 해당 부분도 목록에 포함하여 점검할 필요가 있다.

○ 현장작동성 평가에서는 기계·전기 설비의 위험방지를 위하여 각 설비별 목록화, 점검표에 따른 점검 등을 이행하고 있으며, 전기기계·기구 등에 대한 감전 예방 조치, 화물용 승강기 등에 대한 법정검사 등을 양호하게 수행하고 있다. 또한, 수리·정비 등 유지 및 보수 작업 시 불시기동에 따른 위험방지를 위해 A4인쇄물을 코팅한 표지판 부착, 키 관리 등을 통해 안전한 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고소작업대의 과상승방지장치가 탈락되어 있는 점, 집수정 배수펌프(P-11)에 설치된 체인 블럭의 혹 해지장치를 테이프로 고정하여 작동기능이 상실되게 관리하는 점, 펌프실에서 사용 중인 선풍기 모터부분 케이스가 파손된 점 등은 안전한 작업현장 확보를 위해 개선의 여지가 있다.

○ 건축물 등의 위험방지를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건축물 안전진단을 받아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개선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매월 ‘4·4·4 안전점검의 날’시행으로 시설물(4일), 차량(14일) 및 작업장(24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점은 양호하게 평가된다. 다만, 스튜디오 소형C 나선형계단 상부에 설치된 안전난간 기둥의 간격이 넓은 점, 기계실 및 펌프실 내 배수펌프(P-09, P-11)의 개구부가 열린 상태로 관리되고 있는 점 등은 추락 위험 예방을 위해 개선이 필요하다.

【개선할 점 요약】

1. 법정검사 대상 기계를 목록화하고 관련 부서에서 체계적으로 검사 수행
2. 일부 방호장치(과상승방지장치, 해지장치 등) 성능 유지를 위한 점검 개선

【3】 화재 및 화학물질사고 예방활동 수준

핵심가치

공공기관은 인체에 유해하거나 화재·폭발 위험이 있는 화학물질을 취급할 경우 근로자 중독·질식사고 예방과 위험물질에 의한 폭발·화재·누출 사고 예방 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심사의견

○ 현장작동성 평가에서 기계실 저수조(물탱크)는 밀폐공간으로 지정되어있지 않으며, 해당작업을 외주업체에서 실시함에도 안전작업허가서를 발급한 실적이 없고 질식위험 공간 표지판 등도 부착되어 있지 않고, 질식위험 작업·공간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하여, 기관 본사는 KCA 안전작업 매뉴얼('20.12월) VI.공통 3. 밀폐 공간에서 밀폐공간 작업을 규정하고 있으나 현장작동이 되지 않고 있다. 또한, 도급 발주 시 밀폐공간 프로그램 관련 규정이 부재하여 현장에서 밀폐공간 프로그램 수립·시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등 질식위험 예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 기관은 지하 1층 비상발전기실에 설치된 전체 환기장치(급배기장치)를 사용하여 유증기가 체류되지 않도록 강제 환기를 실시하고 있다. 다만, 비상발전기실 경유저장소에 원료공급 시 오조작 방지를 위해 밸브에 개폐방향 표시, 공급원재료 종류 표시 등의 개선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지하저수조 물탱크 및 중수로 탱크 청소작업 시 질식재해를 예방을 위한 밀폐공간작업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고, 물탱크 및 중수로 탱크의 질식 위험공간에 출입 금지표지를 부착 및 질식사고 위험 특성에 맞는 측정장비, 환기장치, 응급구조 장비를 보유할 필요가 있다.

【개선할 점 요약】

1. 질식재해를 예방을 위한 밀폐공간작업 프로그램 수립·추진 필요
2. 도급 발주 시 밀폐공간 프로그램 관련 규정이 부재

【4】 위험 작업 및 상황 안전관리**핵심가치**

기관의 작업 특성을 반영하여 고위험 작업을 규정하고 안전한 작업을 위한 사전 위험성 검토, 작업 승인 및 감독 등이 포함된 안전작업허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또한, 근로자가 위험상황을 인지하였을 때 직접 일시 작업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 운영을 위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심사의견

○ 기관은 안전관리규정 제47조(위험작업의 단독작업 금지) 및 제49조(작업허가서 발급 및 이행)에 따라 화기작업, 밀폐공간작업, 중량물 취급작업 등 10개 작업에 대하여 위험작업의 단독금지 및 작업허가서 제출, 발급, 현장 확인사항을 규정하여 관리하고 있는 반면에, 지하 물탱크(밀폐공간) 청소작업 등 고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세부절차를 명확하게 수립하여 실행력을 제고하도록 하고 작업중지 요청제 운영 지침에 담당부서 및 담당자를 지정하여 제도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 현장작동성 평가에는 작업장 안전관리제도와 관련하여 최근에 실시한 전기 안전점검(‘20.12월)의 경우 ‘전기 안전 준수 확인서’를 담당자와 수급업체 책임자가 서명하는 방식으로 징구하여 받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해당 확인서는 전기 작업시 주의해야 할 안전수칙(점검 전 차단기 OFF, 통전여부 확인 등)과 책임에 대하여 안전점검 업체에 고지하는 내용으로 되어있어, 안전작업허가제도 등이 현장에서 작동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따라서, 기관에서는 안전작업허가제도 및 작업중지 요청제 등에 대한 매뉴얼, 절차서, 지침서 등을 제정하여야 한다.

【개선할 점 요약】

1. 고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세부절차 명확화
2. 안전작업허가제도 및 작업중지 요청제 등에 대한 매뉴얼, 절차서, 지침서 등 제정

【5】 수급업체 안전보건 관리

핵심가치

공공기관은 도급사업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적격 수급업체 선정 절차 등을 수립하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예방 조치를 누락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또한,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 유지를 위해 인적·물적 지원 및 안전보건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심사의견

<적격 수급업체 선정 및 산업재해 예방 조치>

○ 기관은 안전보건협의체를 운영하고 있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안전보건협의체 회의를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안전보건협의체에 수급업체인 구내식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구내식당의 안전대책 등에 대한 검토가 없는 것이 확인되어 보완이 필요하다.

○ 사내 도급업체 계약 시 조달청 제한 경쟁입찰을 통한 수급업체 선정시스템이 구축되어 있고, 조달청을 통한 도급계약 체결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도급사업시 위험성평가 및 수급업체에 대한 안전대책 검토 자료는 없으며, 적격 수급업체 선정을 위한 안전수준평가 및 선정절차, 기준에 대한 지침이 작성되지 않은 것이 확인되었다.

<수급업체 안전보건교육 등 인프라 지원>

○ 수급업체 인프라 지원에 대해서 수급업체에서 요청 시 회의실 등을 교육 장소로 제공하고 전산 관리 수급업체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 교육자료 등을 지원한 것은 확인되나, 안전보건협의체에 구내식당이 수급업체로 포함되어 있지 않아, 구내식당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조치가 미비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개선할 점 요약】

1. 도급사업 시 적격 수급업체 선정을 위한 안전수준평가 및 선정절차, 기준에 대한 지침 마련
2. 구내식당 대표자를 안전보건협의체에 구성하고 안전대책 등에 대한 검토 실시

3 「안전성과 및 가치」 범주 심사

【1】 안전보건경영 성과측정

핵심가치

공공기관은 안전관리 목표 달성 및 안전경영책임 이행을 위하여 안전보건활동에 대한 성과측정 계획을 수립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성과측정 결과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원인파악, 개선대책 수립 및 환류 활동 등을 통해 개선하여야 한다.

심사의견

○ 안전보건관리 목표 및 실행과제에 대한 성과측정에 관하여, 기관은 안전보건관리 목표 및 실행과제에 대한 성과측정 계획을 수립하여 측정의 주체, 주기, 대상, 절차, 내용 등을 문서화하고, 성과측정계획의 보고절차를 수립하는 등 안전보건경영의 성과측정 기반 구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개선할 점 요약】

1. 안전보건관리 목표 및 실행과제에 대한 성과측정 계획 수립
2. 안전보건경영의 성과측정 기반 구축 필요

【2】 안전경영책임 활동 및 성과 【안전경영책임보고서】

핵심가치

공공기관은 안전경영책임계획 이행 상황에 대한 점검내용, 재해현황 및 다음 연도 주요 계획 등을 안전경영책임보고서로 작성하여 관리함으로써 주요 안전활동의 지속적인 이행과 발전을 통해 안전경영책임을 정착시켜야 한다.

심사의견

기관은 전파법 제 66조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법률에 전파의 효율적 관리 및 방송/통신/전파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조직은 3실 7본부 10지방본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원은 513명으로 정규직 335명, 무기 계약직 173명, 기간제 계약직 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안전관리책임자인 기획조정실(부원장) 산하에 전담조직인 안전센터를 배치하여 운

영하고 있으며 안전업무 전담 인력은 정원 3명에 현원 25명을 운영하고 있다. 기관에서 제출한 안전경영책임보고서 및 참고자료를 참조하여 본 심사를 수행하였으며, 현장검증은 2021.4.29.일 북서울본부에서 실시하였다

<안전활동 추진 활동·실적의 적정성>

○ 기관의 `21년 안전기본계획에 따른 안전경영책임보고서 추진실적을 검토한 결과 20년 처음으로 안전사업비 및 안전관리비 53백만원, 안전관련 물품 및 장비 구입비 7백원, 안전전담 인력 운영에 따른 인건비 954백만원이 집행이 되었다. 안전예산이 전년대비 64% 증가 되어 집행된 부분은 기관의 안전에 대한 실행 의지가 있다고 생각되어 긍정적으로 평가 된다. 안전기본계획의“안전 R&D 보건 관련 교육 콘텐츠 개발”20년 안전투자 중점 사업인 전파/방송 등 기관의 주요 사업과 연계한 국민 생활 속 안전관리 강화 및 5G.IoT 등 ICT 신기술 기반의 국민안전 서비스 대한 상세 내용이 누락되었다. 향후 안전경영책임보고서 작성 시는 안전경영책임계획(기존 안전기본계획)에 따른 안전활동 결과가 확인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 안전경영책임계획(기존 안전기본계획) 작성시는 해당연도 안전활동 추진활동 실적을 점검할 수 있는 방법·주기가 명시되어야 한다. 안전활동을 분기 단위로 점검하여 미비한 사항에 대한 보완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면 목표달성을 이루는데 효과적이다.

○ 기관의 작업장 안전분야는 본원 및 각 지방본부의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 잠재위험발굴 및 감소대책을 이행 하였고, 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위험작업장의 2인 1조 근무, 근속기간 6개월 미만의 신입사원의 현장 단독 작업금지 제한, 각종 재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상황별 안전행동 요령' 배포 등으로 기관 설립 이후 30년간 현장 근로자 사망사고 Zero 달성 성과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 된다.

○ 기관 자체적으로 위험성 평가를 위한 안전관리지침을 제정하고 담당자는 위험성 평가 교육 이수 하였지만 작업장의 위험은 위험을 아는 만큼 보인다고 현장에 능통한 외부 전문가 참여를 통한 작업장 위험성 평가 실시가 필요하고, 위험성과 개선 대책에 대한 내용을 일반화하여 각 지방 본부에 전파하여야 하며, 공신력 있는 곳을 통한 위험성 평가 인증 또는 검증하는 등 작업장 위험성 저감 활동을 추진하는 것을 추천한다.

○ 기관은 전사적 안전관리를 위한 책임자 지정 및 조직 신설 하였고 노.사.협력 업체,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 하는 안전경영위원회를 구성 및 정기적으로 운영(4

회)하고, 근로자의 안전 관리 체계 정립을 위한 내부 마련하는 등 안전을 위한 많은 노력한 점은 긍정적이다.

○ 기관은 코로나 19 자체 대응 지침 수립 및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조치시행, 비대면 AI 발열감지 시스템 도입 등으로 위생관리 출입 강화하였고 그 결과로 전 직원 코로나 19 확진 ZERO를 달성하여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기관은 시설물 안전 확보를 위하여 기간을 설정한 동절기 화재 안전활동, 본사 및 지방본부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 시행, 특정 관리 대상 안전위험 부분 보수/보강 추진, 지역민에게 개방된 구내식당, 카페시설의 보건안전점검 등을 통한 국민 이용시설 질병 사고 발생 Zero 달성, 기간 통신망 두절대비 자체 전국(11개소) 재난 통신망 확보는 긍정적으로 평가 된다.

○ 다만, 안전예산은 3,907백만원 대비 97.2%(3,800백만원)가 집행되었다. 안전예산 실적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안전예산 집행률이 계획 대비 100% 달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 위험성평가 계획 수립시는 수급업체의 위험성평가 이행상태를 점검하고 결과 조치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위험성평가 결과는 수급업체를 포함한 전 직원이 쉽게 공유·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보건활동에 활용(위험예지훈련, 안전작업허가, 안전점검 등)하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 기관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 도입을 위한 중·단기적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21년 10월에 인증 추진을 계획하고 있는 부분은 일정을 단축하여 추진을 추천하고, 인증 심사기관 또는 자체감사 결과 미흡한 사항에 대해 원인을 분석하고 익년도 안전경영책임계획 수립시에는 관련 내용에 대한 보완책을 수립하면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

○ 아울러, 국내·외 안전활동 우수사례 벤치마킹 또는 안전인력에 대한 전문가 육성을 통해 중·장기적 안전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민간분야에 선진기술 등의 우수사례를 전파하는 등의 창의적인 노력을 통해 공공기관으로써의 책무를 다하기를 기대한다.

○ 기관의 안전 경영 체계 구축을 위한 안전을 우선시 하는 안전 경영 체계 운영, 위험성 평가를 통한 유해 위험요인 지속 발굴을 통한 자체 점검, 근로자 안전을 위한 감소 대책 수립 등 21년 중점 추진을 계획한 부분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기관의 현장 검증은 한국방송통신진흥원 북서울본부(서울 마포구 상암동 소재)에서 실시하였으며 안전보건조직과 시스템 구축, 인력 및 운영체계 전반과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대한 반영 여부에 대하여 최신성 유지가 필요하며, 비상대피도의 부착상태, 비상 시 전원차단 등 대비 및 대응이 미흡하여 구체적인 행동요령과 절차서의 마련과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안전역량, 안전수준 및 안전성과 가치 측면에 대하여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구축, 안전보건기초교육 및 전문가양성 교육 등에 대한 안전진단 또는 컨설팅을 통한 안전보건수준활동의 내실화와 전 직원이 동참하는 안전보건 방침의 실행과 실천을 위한 Task Force를 운영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되며 안전경영 책임계획의 수립과 보고서 작성에 대한 벤치마킹과 전문가의 사전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 기관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강화를 위한 안전전문가 신규 채용을 통한 안전전담 조직 강화, 안전보건교육, 작업장 안전/보건관리, 사고조사, 위험성 평가 등에 관한 체계 구축 등의 안전/보건에 관한 많은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임원의 안전활동 성과측정>

○ 기관의 안전활동 성과관리는 성과지표를 계량화하여 목표달성 측정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고, 기관장의 안전 관심을 위하여 현재 계획되고 있는 안전점검(반기별 1회)은 분기회 1회로 추천한다.

○ 다만, 기관의 임원 또는 안전조직의 안전활동 성과관리는 연간 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한 뒤 평가를 실시하여 인사 또는 성과급 지급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체계화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성과지표별 추진정도, 성과달성 정도 등을 점검하는 체계 등을 마련하고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안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 성과지표 목표치는 과거 실적의 추세치 또는 전년도 성과 등에 근거하여 적극·도전적으로 설정하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근거와 논리를 통해 목표치를 설정하였는지를 검토하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안전경영책임계획 점검결과 및 조치계획의 적정성>

○ 기관의 안전경영책임계획과 관련된 주무부처 등의 점검실적은 없다. 향후, 안전경영책임계획 또는 안전경영책임보고서 등과 관련한 주무부처 등의 지적/권고사항이 있는 경우 원인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적정한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실시하면 효과적이다. 또한, 개선기한, 담당자, 추진절차 등을 명확히 하면 실행력이 담보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외부평가기관의 최근 안전평가 결과>

○ 기관은 외부 평가기관의 최근 안전평가는 없고, 국가 안전대진단, 본원/지방 사육 안전정밀 점검 6개소에 대한 점검 결과 양호 판정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대국민 안전가치 실현 노력과 성과>

○ 기관은 해상안전 확보를 위한 소형선박 인명사고 생존을 향상을 위한 조난신호 원격/자동 발사 장치 개발, 산행안전을 위한 전파 MAP 서비스 개발, 농어촌 마을 방송 전파 컨설팅을 통한 전파취약계층 사각지대 해소, 지상파 UHD 기반 재난 경보 시범 서비스 개시 등 대국민 안전 가치 실현을 위한 노력으로 해상안전 부분의 지식경영부문 대한민국 지식대상 국무총리상 수상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다만, 대국민을 위한 안전서비스 관련하여 적극적인 홍보를 통한 많은 사람들이 알고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사용 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 및 계몽 활동을 추천 한다.

<기타 사항>

○ 안전활동은“P(계획)-D(이행)-C(점검)-A(환류)”에 따라 안전경영책임계획을 수립(P)한 뒤 안전활동을 추진(D)하고, 실적을 점검(C)하여 추진상의 문제점 등을 환류(A)하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향후, 안전경영책임보고서는 안전활동 점검 결과·미비점 등이 포함되도록 작성하고 “IV.안전경영책임계획의 주요내용”에 전년도 안전활동 미비점 등을 어떻게 보완하여 당해 연도에 실행할지를 추가하면 효율적으로 안전활동이 운영될 수 있다.

기관의 안전활동 추진내용, 대국민 안전가치 실현을 위한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작업장 안전분야 위험성 평가 , 조직의 안전활동 성과관리는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안전경영책임 활동 및 성과에 대한 기관의 노력을 “D”로 평가한다.

【개선할 점 요약】

1. 기관의 안전활동 성과관리는 성과지표를 계량화하여 목표달성 측정 실시
2. 임원 또는 안전조직의 안전활동 성과관리는 연간 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하고 평가 실시

【3】 안전문화 확산

핵심가치

공공기관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안전가치가 기관의 안전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내·외부 전반에 걸쳐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체계적인 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심사의견

○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계획 및 활동 참여·전개·지원에 있어 기관은 ICT 기술을 반영한 대국민 생활안전 활동으로 영유아 및 어린이 시설 전자파 안심진단 서비스, 영세어민 대상 긴급조난신호 발사장치 개발 및 기간 통신망 두절 대비 자체 재난통신망 구축 등 국민안전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또한, 코로나-19 예방 강화 및 확산(KCA 코로나19 방역 대응지침 강화) 방지를 위한 안전문화 활동과 ‘4·4·4 안전점검의 날’에 시설물 점검(4일), 차량점검(14일) 및 현장점검(24일)을 실시하는 점은 기관 특성에 적합하게 실시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홈페이지, SNS, 지상파 방송 등을 활용한 대국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 등의 활동이 미미하고 안전문화 확산 활동을 기관의 담당자 중심으로 진행하였으므로, 수급업체를 포함한 전사적 차원의 안전문화 확산 활동으로 연결시키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개선할 점 요약】

1. 홈페이지, SNS, 지상파 방송 등을 활용한 대국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 필요
2. 안전문화 확산 활동에 수급업체 포함 필요

【4】 사망사고 발생 및 감소 성과

핵심가치

공공기관은 안전활동을 통해 안전관리 대상 사업·시설에서 종사하는 직영, 수급업체, 발주현장 근로자의 사망사고 감소 성과를 창출하여야 한다.

심사의견

○“공공기관 사망사고 현황(사망승인일 기준)”기준으로 기관은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

Ⅲ 개선사항 요약

범주	개선 사항
안전역량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안전경영 체계 수립·이행 및 참여와 소통의 자율 안전문화 확산을 통한‘안전사고 Zero’추진 내용에 있어 구체화 필요 2. 개편된 조직의 실행력 확보 및 제고를 담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 노력 3. 안전보건 관련 자격취득 및 외부 전문교육 등의 체계적인 이행 및 관리 4. 안전보건 관련 예산은 안전확보 취지에 부합하도록 집행계획 수립 5. 근로자 안전보건 역량강화 및 건강증진활동 비용 등 실효성 높은 예산 반영 6. 안전관리지침에 기관특성을 고려한 내용과 근로자 대표의 요구사항 반영 7. 안전관련 근로자 의견 수립 절차와 결과를 공유할 수 있는 체제 마련 8. 전담조직의 활동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직 차원의 협조 9. 안전경영책임계획(구 안전기본계획) 실행과제 이행여부 모니터링 절차 마련 10. 위험성평가 계획 및 도급 및 발주 작업장 위험성평가 점검 계약 조건 지침 마련 11. 위험성평가 시 건물관리와 보안 등 주요업무에 대해 보완 필요 12. 건강진단 사후관리 담당자를 지정하는 등 근로자 건강유지 노력 13. 근로자 건강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수립을 통해 실행력 제고 14. 교육계획에 대한 내용 및 시기의 구체적 수립 15. 직원들의 안전보건 관련 방침과 제도에 대한 인지수준 향상 개선 필요 16. 시설물 및 화학물질 저장탱크 화재폭발위험 등을 고려한 시나리오 작성 17. 기관 특성에 맞는 비상상황 대비 및 대응 지침을 수립하고 교육 18. 재해발생 시 조사 시기 및 방법, 조사팀 구성 등의 내용 구체적 명시

안전수준 【작업장 안전관리】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MSDS 관련하여 세부지침 제정 및 근로자 공유 2. 보호구 관리 기준 마련 3. 법정검사 대상 기계를 목록화하고 관련 부서에서 체계적으로 검사 수행 4. 일부 방호장치(과상승방지장치, 해지장치 등) 성능 유지를 위한 점검 개선 5. 질식재해를 예방을 위한 밀폐공간작업 프로그램 수립·추진 필요 6. 도급 발주 시 밀폐공간 프로그램 관련 규정이 부재 7. 고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세부절차 명확화 8. 안전작업허가제도 및 작업중지 요청제 등에 대한 매뉴얼, 절차서, 지침서 등 제정 9. 도급사업 시 적격 수급업체 선정을 위한 안전수준평가 및 선정절차, 기준에 대한 지침 마련 10. 구내식당 대표자와 근로자대표를 안전보건협의체에 구성하고 안전대책 등에 대한 검토 실시
안전성과 및 가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안전보건관리 목표 및 실행과제에 대한 성과측정 계획 수립 2. 안전보건경영의 성과측정 기반 구축 필요 3. 기관의 안전활동 성과관리는 성과지표를 계량화하여 목표달성 측정 실시 4. 임원 또는 안전조직의 안전활동 성과관리는 연간 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하고 평가 실시 5. 홈페이지, SNS, 지상파 방송 등을 활용한 대국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 필요 6. 안전문화 확산 활동에 수급업체 포함